



21세기 농업정책의 과제

실용적 정책 합리적 채택...농업인 자생력 위한 집중투자 필요

급변하는 농업환경 가닥잡아야

5천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농업은 그동안 발전과 정체를 거듭하면서도 국제화에 민감하지 못한채 유지되어 온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80년대 후반부터 농업분야에도 국제화 개방화 바람이 전세계를 휩쓸면서 우리농업도 예외일 수 없게 되었다.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하였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이어 95년 1월부터 새로운 무역체제인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도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연차적으로 개방하게 되었으며 금년 7월부터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해야할 처지다.

국제무역에 통용되었던 비관세장벽도 예외없이 관세화되었고 생산과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보조금제도도 단계적인 감축으로 전환되어 무한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96년 12월에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하면서 선진국과 함께 각종 선진농업정보를 활용하게 되었고 각종 제도나 시책을 시장지향적으로 선진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농업, 농촌, 농민문제도 국내의 우산속에서 벗어나 국제화·선진화에 참여해야 했으며 지금은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국면에 적응하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농업정책여건은 대내

외적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농업부문 어디서나 국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며 경쟁에서 이탈되면 존립이 어렵게 되었다. 지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간의 경쟁은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농업생산방식도 토지 의존적이고 노동집약적인 형태에서 점진적으로 기술, 정보, 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며 농지가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절대적인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주변에서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농업경영방식도 환경을 보존하면서 영농방법이 개발될 수 있

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비자들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방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상업농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이 과제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의 목표는 농업생산력을 높이는 농업의 발달과 농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목표를 향해 시책을 개발해 왔다. 우리농정도 이와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국제화·개방화에 걸맞는 선진농업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차원높은 시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바라는 선진농업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많은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정부는 주요 농정의 과제를 국민식량의 적정 자급률 유지로 쌀은 반드시 자급하며 영농의 규모화, 기술개발, 유통혁신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세계 무역기구 출범으로 확대된 해외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까지 농산물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게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공격이 최대의 방이라는 시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농정과제로서 국민식량 자급을 유지하기 위해 비재배면적 확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생산과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정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규모 확대, 첨단기술 개발, 유통혁신 추진 그리고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수출농업단지조성, 수출유망지역에 대한 시장개척 활동 강화, 수출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요농정시책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다. 95년에는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 96년에는 일류국가를 향한 농림어업부문의 도약을 위해 전례없는 많은 예산과 투자를 했으며 시책개발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성과는 만족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인식으로 시책개발 필요

우리농정의 목표인 21세기 선진농업국 건설은 정부가 설정한 주요 농정과제들이 착실하게 추진되더라도 대내외적인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로 시행착오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정책의 주체로서 정부는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왔으나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관되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이며 계획수립부터 농민과 더불어 추진하는 적극적 자세가 아니라 성장과 개발논리로 추진되



권 원 달
충북대학교 교수

었던 것이다. 농업정책수단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단보다는 단기적이고 속효성인 제도와 규제로 집행되었다. 농정의 대상인 농민도 부문간, 품목간, 계층간, 지역간의 다양한 요구 때문에 주도적이고 집중적인 시책대상이 명확하지 못하여 시책효과가 분산적이고 비효율적이 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적었다.

이제 21세기 선진농업국 건설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농민간의 역할분담이 더욱 중요하며 실용성있는 정책수단이 과학적이고 합목적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농업국 건설은 토지,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적절한 배분과 결합도 중요하지만 기술, 정보, 자본집약에 대한 혁신적인 인식과 전환기적 시책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기 때문에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